Ⅰ 서론

2022년 11월 4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3년 5월 계획대로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중개 플랫폼이 참여하여 신용대출에 대하여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12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대출이동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고객이 본인 명의의 대출과 금융회사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대환할 대출을 선택하도록 하며, '대출이동 시스템'은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 간 자율협약을 통해 소비자가 이동하려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원리금을 대신(代) 상환(換)하도록 한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대출고객의 금리가 낮아지는 등 대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회사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폐해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는 차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대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 기능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대환대출 활성화로 인하여 대출계약의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면 금융회사는 당초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출심사를 할 유인이 줄 수 있다. 대환대출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환대출의 대출비교 플랫폼은 사실상 금융 플랫폼을 통하여 운영되는데, 고객 접점을 이미 확보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금융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접속 및 이용이 늘어날수록 고객 데이터 생산이 늘어나고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더욱 증대시키는 '데이터-네트워크-활동 순환'(DNA loop) 작용으로 인하여 독점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환대출 인프라의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